

## 연구논문

## 주민등록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비교에 관한 연구

Comparison of Resident Register With Census Data  
According to Age Groups

서우석\* · 이명진\*\*

U - Seok Seo · Myoung - Jin Lee

이 연구는 주민등록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비교를 통하여 주민등록자료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령대 비교 결과,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차이가 생애주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주민등록 신고의 부정확성 때문으로 추정되는 노인층 이외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에서 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주민등록과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24세의 연령층에서는 대학 진학이나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인하여 대학과 공단 소재지로 집중 이동하면서 주민등록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등록과 총조사인구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연령대별로 차이율을 파악하는 것이 주민등록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차이가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은 두 조사의 차이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오차에 대한 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센서스, 행정자료, 연령 집단

To estimate the usability of resident register for the statistical purpose this study compares resident register with census data. The comparison shows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resident register and census data are closely related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서우석,  
E - mail : usseo@uos.ac.kr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with life cycle. Among the aged the incorrect registration is supposed as the main cause for the difference, while among the other age groups the problems rise mainly from their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Especially among the age group between 15 and 24 level of the difference is very high, which results from university entrance and employment. This result confirms the importance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se data according to age groups. The structural character of this difference suggests that the difference can be explained and reduced through policies.

Key words : census, administrative records, age groups

## I. 서론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환경이 악화되고 비용이 증대하면서 센서스 방식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홍두승 외 2002; 김설희·강계화 2005; 이명진 외 2006; 이건 2007; 통계개발원 2008). 주요한 개선방안 중 하나가 행정자료의 활용이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구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센서스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하여 이제 별도의 실사를 수행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홍두승 외 2002).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센서스를 대체하는 경우 전 국민 대상의 조사에 수반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행정정보의 통합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에 대한 기술적 해결과 사회적 합의가 달성되면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사회 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 기존의 인구센서스에 비해 자료산출 주기를 축소하고 자료수집에서부터 공표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자료의 시의성 측면에도 이점이 생긴다. 행정자료에 의한 센서스 대체까지는 아니라도 행정자료의 활용을 바탕으로 조사구 설정의 정확성을 높이거나 응답 부담을 더는 방식을 통해 센서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홍두승 외 2002; 이건 2007).

이 연구는 주민등록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비교를 통하여 주민등록자료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행정자료를 통한 통계작성에서 일차

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것이 인구조사의 영역이다. 주민등록자료에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 항목과 중복되는 다수의 항목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홍두승 외 2002; 김설희·강계화 2005). 따라서 주민등록자료를 통해 신뢰할 만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면 인구주택총조사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거나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 호적제와 별개로 주민등록제도가 생겨난 배경은 인구이동의 증가에 따라 호적이 있는 본적지와 실생활을 영위하는 주소지 사이의 괴리 증 가이다. 1942년 일제의 기류령(寄留令) 실시로 본적지 이외에 공증할 수 있는 주소지로서 기류적을 설정한 것이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효시로 볼 수 있 다(한국인구학회 2006: 613). 본적지를 이탈하여 90일 이상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때 강력한 제재를 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의 강도는 해방 이후 약화되었고, 1962년 박정희 정권하에서 조선기류령 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등록법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1968년 주민등 록법을 대폭 개정하여 호적과 관련사항은 호적법에 기준하도록 하고 주민의 기타 신고사항도 관련 기관 간의 통보로 확인하도록 하고 무단 전·출입자를 사실조사에 의하여 강제 등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등록제도의 공신력을 크게 높였다(최봉호 1997).

특히 주민등록자료는 전체 국민을 포괄하며 모든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통계적 활용가능성의 이점을 갖고 있다. 행정자료를 센서스 및 사회·경제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행정자료의 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과 거처를 파악 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다. 이 고유번호를 통해 상이한 자료들을 연계하여 통계 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등록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제한점들 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주민등록과 인구주택총조사는 대상 범위가 다르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상주인구를 조사하는 데 비해 주민등록은 주소지 등록인구 를 대상으로 삼는다. 주민등록인구가 여행, 군 복무, 학업의 이유로 주소지를 벗어나는 경우 주민등록과 인구주택총조사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국내나 해외 등의 외지에 살고 있는 가족은 인구주택총조사에

서 제외된다. 이때 통상 적용되는 기준은 3개월 이상 외지에 살거나 살 예정인 사람이 된다(통계청 2008).

다음으로 주민등록과 인구주택총조사 모두 오차를 갖고 있어서 거주인구수에 대한 진실값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주민등록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나 거짓신고,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 미발급, 행정오류에 기인한 오차를 갖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의 누락이나 부정확한 정보 수집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민등록과 인구주택총조사의 차이가 주민등록자료에 의한 인구주택총조사의 대체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이건 2007). 주민등록과 인구주택총조사 사이에서 차이가 적을수록 주민등록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원인 추정과 보정이 가능하다면 주민등록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과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집계통계 중 연령별 인구 수 통계를 비교함으로써 주민등록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고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령별 인구집계는 인구통계의 핵심항목이다. 주민등록을 통한 각 연령층 인구집계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인구집계 사이의 차이는 그 자체로서 주민등록을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또한 주민등록과 인구주택총조사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연령별 및 지역수준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함으로써 주민등록의 활용가능성을 더욱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세분화된 구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수준의 차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주민등록과 인구주택총조사 사이의 차이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연령대나 지역별 차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서 차이들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주민등록과 인구주택총조사 사이의 연령대별 차이를 지역수준별로 파악함으로써 오차발생 현황과 원인에 대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엄밀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지만 집계자료를 통한 분석 결과가 후속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선행연구

행정자료를 이용한 센서스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입장을 보면 상이하다. 전통적 방식의 센서스가 가지는 문제점들은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에도 각국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은 행정자료의 활용가능성이다.

미국의 경우 포괄성을 가지는 단일한 인구등록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행정자료들을 연계하더라도 포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별개의 인구등록 자료의 도입은 정치사회적 부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센서스를 2000년 센서스에 적용하지 않도록 판단하였다(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95).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자료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자료 사용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Prevost & Leggieri 1999; Scalia 1999; Sweet 1997).

유럽 국가들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센서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센서스를 대체하였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들은 현재 전통적인 센서스 방식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센서스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Laihonen 2000).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기존의 센서스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행정자료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센서스에 행정자료를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으로서 부각되고 있다(Blum 2000).

아래와 같이 Eurostat(2003)은 행정자료가 통계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행정자료의 메타자료가 생산과정 및 주요 개념의 정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통계항목의 변수 정의와 행정자료의 항목에 대한 개념 규정이 일치해야 하고, 자료생산의 기준 시점이 통계조사와 일치해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에 대한 자료의 포괄성이 확보되면서 동시에 자료의 중복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할 때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의 수준은 명확성, 행정개념, 포괄성, 기준시점, 시의성, 오류 정도, 완결

성, 매칭 가능성 그리고, 자료보안 등의 기준에 의해 평가·보고되어야 한다.

등록자료에 기반을 둔 인구센서스를 수행하고 있는 핀란드 통계청의 경우 신뢰도, 국제 권장기준, 시의성의 차원에서 등록자료 센서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Statistics Finland 2004). 신뢰도 검증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검증들이 그동안 수행되었다. 1980년도에는 7만 명 표본규모의 노동력 조사를 등록자료에 바탕을 둔 통계조사와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두 조사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실증됨으로써 등록자료를 이용한 통계생산 방식이 그대로 추진되었다. 1990년에는 2% 규모의 인구 및 주택에 대한 질문지 조사를 병행하여 등록자료에 의한 통계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 구성의 면적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이나, 직업이 복수일 때 어떠한 직업을 주된 직업으로 응답하는지와 같이 중복조사로도 정확한 응답을 찾기 어려운 항목들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온 것이 정부부처 간의 협조이다(Brackstone 1987). 캐나다의 경우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센서스 조사에 의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으나, 통계청 이외 다른 기관이 생산한 자료들을 이용하면서 해당 기관의 자료 생산 방식이나 필요한 정보의 양 등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정부 전체의 차원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전체 차원의 정책이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크게 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의 필요성이나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들과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와 실제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자료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홍두승 외(2002)는 현재 센서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유럽 국가들의 행정자료 활용 실태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행정자료의 활용이 주민등록자료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개인의 비밀정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도 사용이 될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설희·강계화(2005)는 행정정보와 GIS를 연계하여 통계생산에 활용

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인구주택총조사의 항목들 중에서 행정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주민등록자료를 통해 정보 획득이 가능한 항목들은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구분, 5년 전 거주지 그리고, 총출생아수였다.

다음으로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와 실제 비교한 연구로서 김근영 외(2003)는 1995년과 2000년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가구자료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인구·세대자료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두 자료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위장전입에 의한 주민등록 과잉, 일시적 거주인구 유입에 따른 주민등록 과소, 역외거주인구의 센서스 대상 제외가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명진 외(2006)는 센서스 시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명부-거처정보 자료와 건축물대장의 일치 여부를 분석하였다. 주택유형과 건축물정보의 상응관계에 따라서 상이한 매칭 유형이 나타나며 이러한 매칭 유형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 정보의 활용성이 상이하게 평가되었다. 매칭의 어려움은 특히 구조소체계에서 가구와 건물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건축물대장과 조사자료를 일치시키기 힘들다는 사실에 있었다. 인구부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로서 이건(2007)은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등록과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자료를 비교하였다.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으로 집계된 인구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 집계된 인구 수보다 약 174만 명이 많았고 이 차이는 전체 인구수의 약 3.6%에 해당했다. 이는 1995년의 3.1%보다는 늘었고 2000년의 4.0%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지역단위별로 비교하였을 때 대지역보다 소지역에서 차이율이 컸으며, 이는 소지역에서의 오차가 서로 상쇄되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접적으로 주민등록자료의 활용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이지연(2007)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오차율을 연령별·지역별로 추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였다.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총조사에서 가장 많이 누락된 최대 누락집단은 35~39세 연령층이었다.

### III. 분석

#### 1. 자료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자료와 이에 근접한 시점으로서 2005년 12월 31일 기준의 주민등록 집계자료를 비교하였다<sup>1)</sup>.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의 연령별 집계자료는 모두 통계청이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공표한 읍·면·동 수준의 인구집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별 비교를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4가지 지역수준에서 분석하였다. 통계청이 제시한 연령별 집계는 5세 연령층을 단위로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5세 연령층을 기본단위로 연령별 비교를 수행하였다. 모든 지역수준에서 연령층의 단위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나 읍·면·동 수준에서는 70세 이상의 연령대를 통합하여 측정하였다. 각 지역 내 해당 연령대 인구규모가 적어 약간의 변화로도 차이율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주민등록과 인구주택총조사 집계자료를 비교하는 통계로서 ‘차이율’과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을 사용하였다. 차이율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차이율} = \{(\text{주민등록인구} - \text{총조사인구}) / \text{주민등록인구}\} \times 100$$

연령별 비교를 할 때 차이율은 일차적으로 각 연령대별로 계산된다. 특정 지역에서 주민등록자료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대에서 나타난 차이를 종합한 값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연령대 차이율의 산술평균값은 각 연령대 간의 상쇄효과가 있을 경우 차이의 규모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연령대 차이율의 절대값을 평균한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집계자료의 사용에 의존하여 분석한 것은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주민등록과 인구주택총조사의 불일치가 주로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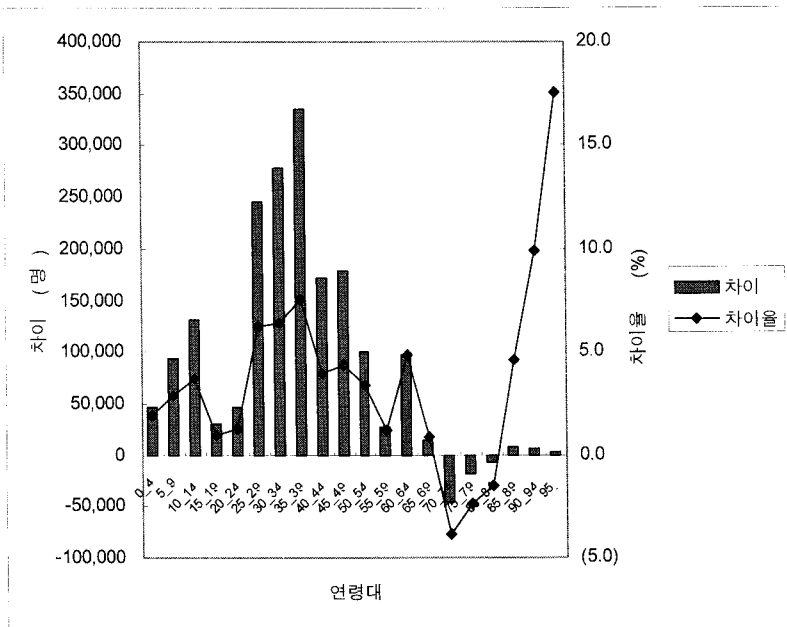
1) 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자료 사이에는 2개월 사이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이건(200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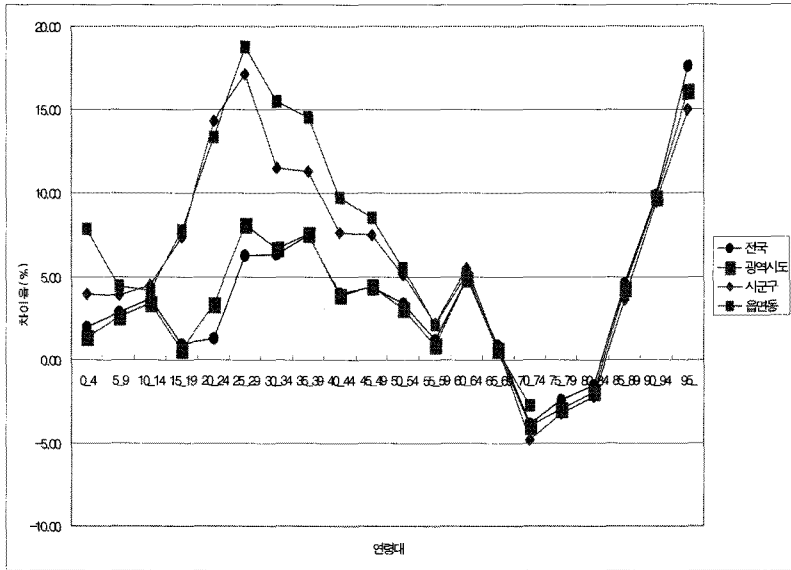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개인 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5%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과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자료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보완 분석을 실행하였다.

## 2. 전국 수준의 연령대별 차이율과 지역수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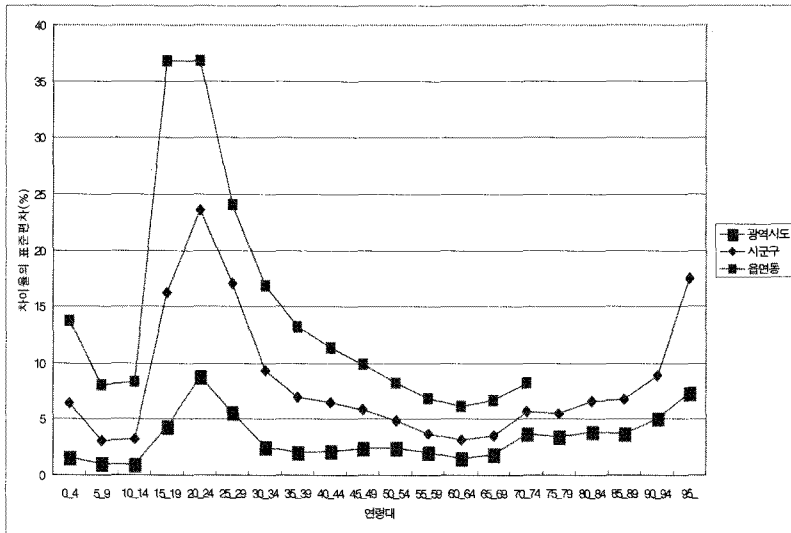
먼저 전국 수준에서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차이를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차이와 차이율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인구수준에서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차이율은 3.6%이지만 연령대별로 차이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서 4% 대 이상의 높은 차이율을 보이는 연령대도 적지 않다. 주민등록 인구보다 총조사인구가 더 많은 연령층도 있어서 연령대들 사이에서 차이율의 상쇄효과도 발생하였다.



<그림 1> 연령대별 차이와 차이율



<그림 2> 지역단위별 연령대별 차이율 평균 비교



<그림 3> 지역단위별 연령대별 차이율 표준편차 비교

차이율의 변화 패턴에 따라 전체 연령대가 구분된다. 0~4세, 5~9세, 10~14세의 구간에서는 주민등록에 비해 총조사 인구가 적었고 그 차이가 점차 늘어났다. 15~19세, 20~24세의 구간에서는 차이의 규모가 줄었다가 25~29세 구간부터 다시 차이가 큰 쪽으로 증가하였다. 35~39세 구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난 차이는 40~44세 구간부터 줄어들어서 70~74세, 75~79세, 80~84세 구간에서는 주민등록보다 총조사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5~89세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총조사보다 주민등록의 인구가 많았고 인구 자체가 줄면서 차이율이 매우 높았다.

다음으로 지역수준별로 차이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아서 비교하였다. <그림 2>는 4가지 지역수준별로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차이율의 평균을 제시하였고, <그림 3>은 3가지 지역수준별로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차이율의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연령대별 차이율 평균을 보면 연령대별 패턴 자체는 모든 지역단위 수준에서 유사하지만 규모는 지역단위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다. 이견(2007)의 결과에서처럼 광역단위에서 소지역단위로 갈수록 차이율이 더 커졌다. 특히 광역시·도와 시·군·구 수준 사이에서 차이율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지역으로 갈수록 각 연령대에서 주민등록과 총조사의 괴리가 커짐을 의미한다. 대체로 전국 수준에서 차이율이 높은 연령대들에서 지역수준별 차이도 컸다.

반면 15~19세와 20~24세의 연령대는 이러한 경향의 예외로서 주목할 만하다. 전국 수준이나 광역시·도에서는 차이율이 높지 않았는데 시·군·구·읍·면·동 수준에서는 차이율이 상당히 높았다. 전국 수준의 차이율과 소지역 수준의 차이율 사이에 나타난 격차는 인구이동시 발생한 주민등록과 실주거지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정 소지역에서 나타난 차이가 다른 소지역의 차이와 서로 상쇄되면 광역수준에서는 차이율이 축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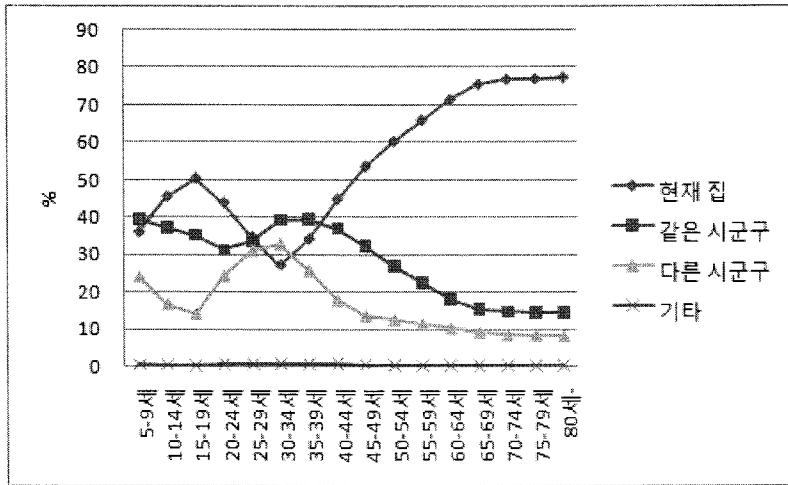
연령대별 차이율의 표준편차는 소지역 수준으로 갈수록 컸다. 특히 15~19세, 20~24세의 연령대에서 표준편차가 가장 컸다. 반면, 전국 수준에서 차이율이 가장 높았던 35~39세나 30~34세의 연령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차이의 지역별 분포가 연령대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30대의 경우 주민등록과 총조사 인구의 차이가 전국적으로 비교적 균

일하게 높은 반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차이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가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이율이 연령대에 따른 특정한 유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차이의 발생 원인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대상의 과소집계에 따른 범위오차(coverage error)가 발생한다. 또한 전국 수준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은 사망, 행방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은 있으나 실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인구의 존재이다. 외교통상부(2007)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재외동포는 2005년에 비해 약 40만 명이 증가한 7,044,71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체류자가 약 15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현황에 대한 자료에서 체류자에 대한 연령별 집계는 발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해외 체류자들이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해외 주재원, 자영업, 전문직,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볼 때, 크게 차이가 발생한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가 이에 상당히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연령대별 차이는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및 인구이동의 변이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005년 센서스에서 지난 5년간 거주지 변화를 측정한 내용을 제시한 <그림 4>를 보면 20대와 30대 층에서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연령층은 직장 근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단기 이주, 유학이나 취업에 따른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인해서 가구면접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이동성이 강한 연령층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이지연(2007)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20~30대 층의 활동성과 구별하여 주목할 만한 것이 15~19세, 20~24세의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 연령층은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차이율이 높지 않았으나 소지역별로 보았을 때는 차이율이 매우 높았다. 학업을 수행하고 사회적 진출을 준비하며 이동이 발생했으나 아직 주거지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그림 4〉 연령대별 지난 5년간 거주지 변화 정도

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진학에 따라 부모와의 동거에서 벗어나 하숙이나 자취의 형태로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이동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주민등록신고 규정을 보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업이나 취업이 일시적인 경우 기한을 지나 지연 신고하거나 주민등록 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소지역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끝으로, 노년층에서는 상반된 방향의 차이율이 발생하였다. 주민등록보다 총조사의 인구가 많은 부(-)의 차이율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과거 행정등록의 미비로 인해 주민등록집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층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정(+)의 차이율이 발생한 원인은 사망시 신원불명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수용으로 인해 조사 응답여건이 안 되어 총조사에서 제외된 경우로 추정된다.

### 3. 지역별 비교 분석

다음으로는 지역별로 연령대별 차이가 발생하는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았다. <표 1>에서는 각 광역시·도별로 연령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 주민등록과 총조사 차이를 계산한 차이율과 연령대 절대차이율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광역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차이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전라남도(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라북도(5.7%), 제주도(4.8%), 충청남도(4.2%) 등이었다. 차이율이 낮은 지역으로는 광주광역시(-0.9%), 대전광역시(1.1%), 충청북도(1.8%) 등이 있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4.0%, 3.5%로서 평균적인 수준의 차이율을 보였다.

<표 1> 연령대별 차이율 평균 및 절대차이율 평균의 시·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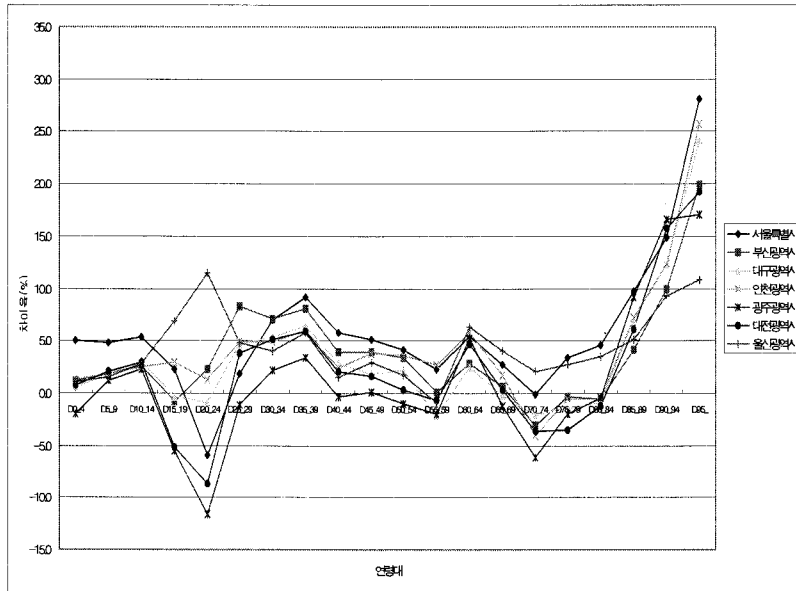
행정구역명	주민등록 인구수	총조사 인구수	차이율 (%)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 (%)
서울특별시	10,167,344	9,762,546	3.98	6.38
부산광역시	3,638,293	3,512,547	3.46	4.25
대구광역시	2,511,306	2,456,016	2.20	4.14
인천광역시	2,600,495	2,517,680	3.18	4.80
광주광역시	1,401,745	1,413,644	(0.85)	4.53
대전광역시	1,454,638	1,438,551	1.11	4.68
울산광역시	1,087,648	1,044,934	3.93	4.48
경기도	10,697,215	10,341,006	3.33	4.34
강원도	1,513,110	1,460,770	3.46	6.08
충청북도	1,488,803	1,453,872	2.35	4.24
충청남도	1,962,646	1,879,417	4.24	5.04
전라북도	1,885,335	1,778,879	5.65	6.22
전라남도	1,967,205	1,815,174	7.73	8.11
경상북도	2,688,491	2,594,719	3.49	5.19
경상남도	3,160,431	3,040,993	3.78	4.49
제주도	557,569	530,686	4.82	4.43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은 차이율과 상당히 다른 분포를 보였다. 전라남도처럼 차이율과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이 모두 높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경우 차이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은 모두 4.5% 대 이상을 기록하여서 다른 지역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상이한 방향의 차이가 발생하여 서로 상쇄됨으로써 지역의 차이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차이율이 낮다고 해서 주민등록의 활용가능성이 다른 시·도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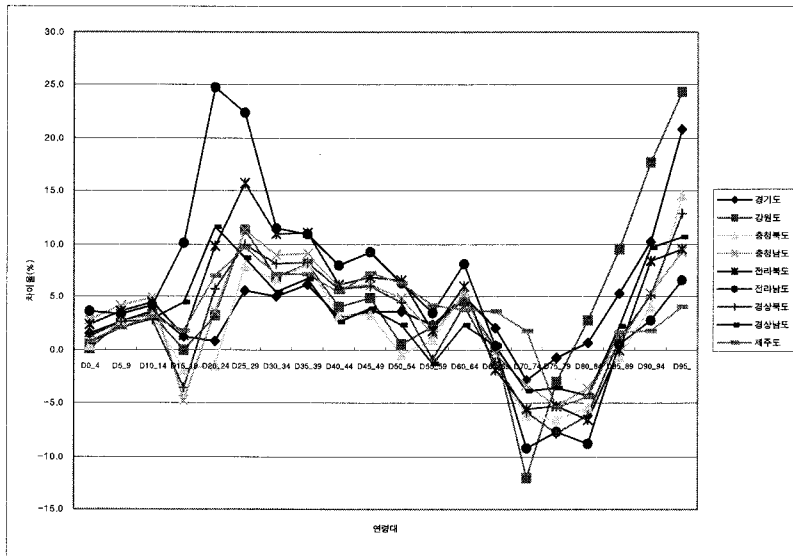
〈그림 5〉와 〈그림 6〉에서는 각각 광역시별과 도별로 연령대별 차이율을 비교하였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로 광역시는 광역시끼리, 도는 도끼리 서로 유사한 연령대 차이율의 유형을 가졌다. 광역시와 도 사이에 특히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연령대는 15~29세와 70~84세의 연령대였다.

15~29세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울산을 제외하고 부의 차이율을 보이거나 차이율의 절대값이 그리 크지 않았던 반면, 도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매우 높은 정의 차이율을 보였다. 광역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주민등록보다 많고 도에서는 젊은 연령층이 주민등록보다 적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이 농촌지역과 중소도시로부터 대도시로 이동한 결과로 보인다.

70~84세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차이율의 절대값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도에서는 대체로 매우 낮은 부의 차이율을 보였다. 이들 노년층에서 주민등록보다 총조사인구가 더 많은 것은 행정등록의 미비나 주민등록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심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차이율이 높았던 30대나 80대 중반 이후의 경우에는 시·도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뚜렷한 유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5〉 연령대별 차이율 : 광역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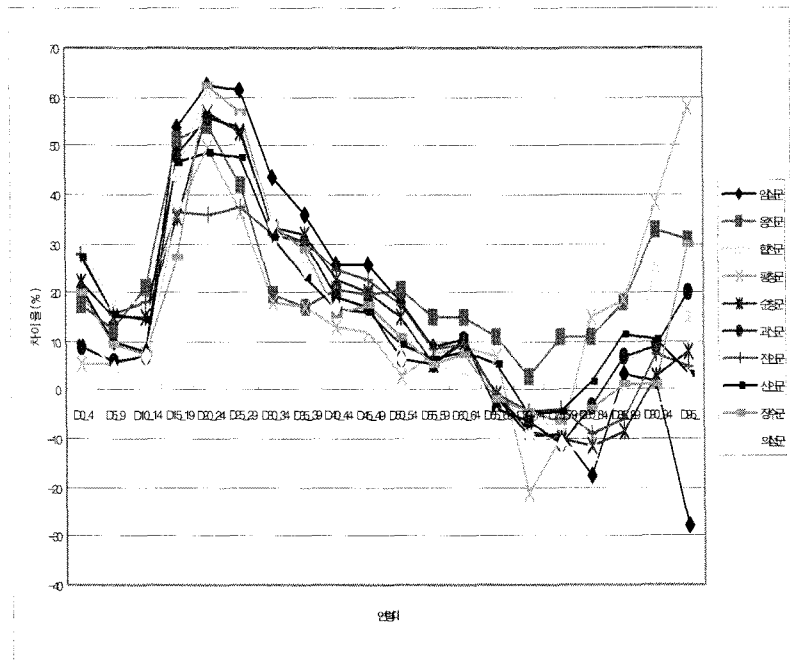


〈그림 6〉 연령대별 차이율 : 도 비교



<표 2>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 기준 시·군·구별 차이율: 상위 10개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인구	총조사인구	차이율 (%)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 (%)
전라북도	임실군	32,511	25,682	21.0	22.7
인천광역시	옹진군	15,609	12,261	21.4	22.2
경상남도	합천군	58,162	47,651	18.1	20.1
강원도	평창군	45,033	38,507	14.5	19.3
전라북도	순창군	32,012	26,250	18.0	19.2
충청북도	괴산군	38,595	32,208	16.5	18.0
전라북도	진안군	29,021	23,915	17.6	17.6
전라남도	신안군	46,451	38,429	17.3	17.5
전라북도	장수군	24,755	20,486	17.2	17.5
경상북도	의성군	64,457	56,522	12.3	17.0



<그림 7> 절대차이율 평균 기준 상위 10개 시·군·구별 연령대별 차이율 꺾은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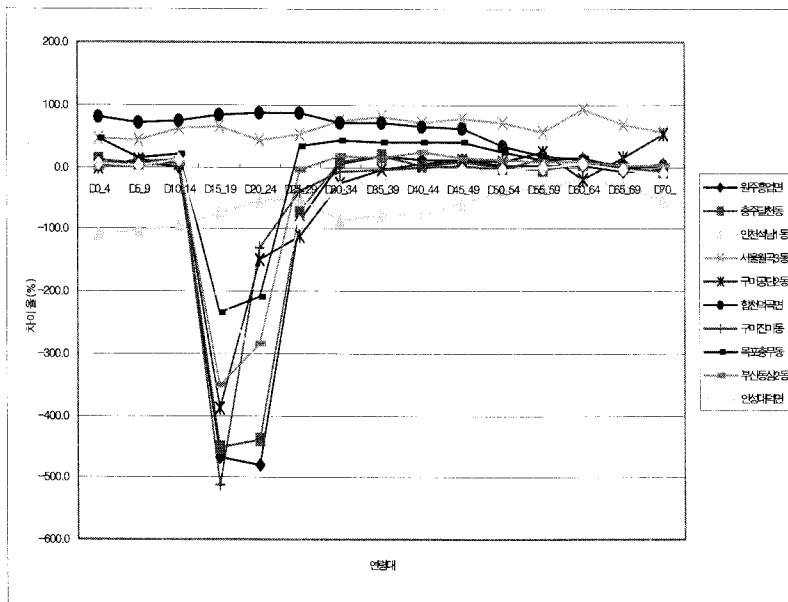
〈표 2〉와 〈그림 7〉은 시·군·구 수준에서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 기준 상위 10개 지역의 조사결과이다.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이 가장 큰 상위 10개 지역은 주민등록을 통계자료로서 활용하기 가장 곤란한 지역이다. 시·군·구의 경우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 임실군이었고,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상남도 합천군,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등의 순서였다. 상위 10개 시·군·구는 모두 농어촌지역이었고 전라북도 지역이 4개로 가장 많았다. 모두 높은 수준의 정의 차이율을 보이는 지역들이었다. 10개 시·군·구는 80대 이상의 고연령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사한 형태였다. 특히 15세 이상 29세의 연령대에서는 모두 30%대 이상의 높은 차이율을 보였다. 이는 10대 후반과 20대가 주민등록자료를 통계자료로서 활용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 연령대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다.

〈표 3〉과 〈그림 8〉은 읍·면·동 수준에서 절대차이율 평균 기준 상위 10개 지역의 조사결과이다. 상위 10개 읍·면·동은 시·군·구 차원의 상위 10개 지역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군·구 수준과는 달리 읍·면·동 수준에서는 상위 10개 지역들 중에서 정의 차이율을 보인 곳이 2개 지역이었고, 나머지 8개 지역이 부의 차이율을 보였다.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 기준의 상위 10개 읍·면·동 다수에서 총조사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많았다.

상위 10개 읍·면·동 지역의 연령대별 차이율에서는 세 가지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 10개의 읍·면·동 중 7개 지역은 15~19세, 20~24세의 연령대 차이율이 매우 낮은 경우였고, 2개 지역은 전체 연령대에서 차이율이 비교적 고르게 높은 경우였으며, 나머지 1개 지역은 전체 연령대에서 차이율이 비교적 고르게 낮은 경우였다.

〈표 3〉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 기준 읍면동 차이율: 상위 10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등록 인구	총조사 인구	차이율 (%)	연령대 절대차이율 평균(%)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6402	10703	(67.2)	73.7
충청북도	충주시	달천동	5124	8699	(69.8)	69.2
인천광역시	서 구	석남1동	13913	23031	(65.5)	64.4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3동	702	233	66.8	63.8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2동	4491	7255	(61.5)	55.4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1713	909	46.9	54.3
경상북도	구미시	진미동	15504	22954	(48.1)	51.2
전라남도	목포시	충무동	3744	4138	(10.5)	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4972	6812	(37.0)	49.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8922	14175	(58.9)	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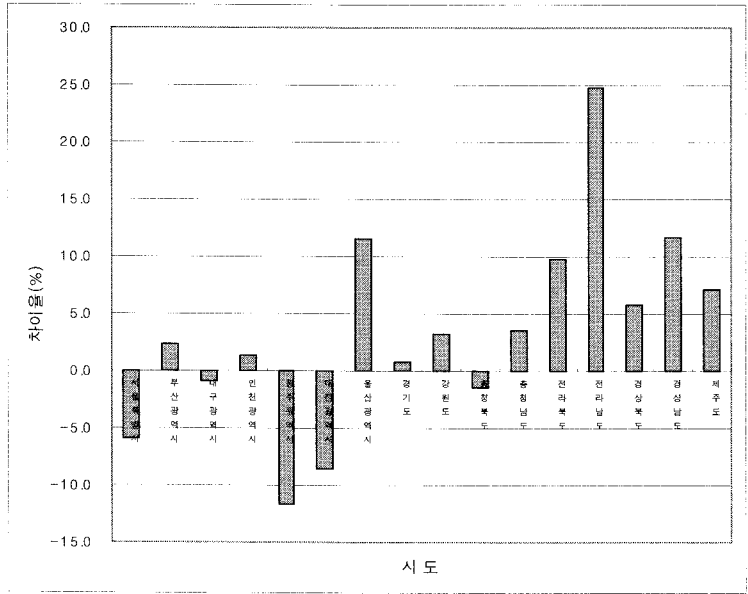
〈그림 8〉 절대차이율 평균 기준 상위 10개 읍·면·동 연령대별 차이율 꺾은선 그래프

15~19세, 20~24세 연령대의 차이율이 매우 낮은 지역들은 모두 대학 소재지와 공단 소재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원주시 흥업면, 충주시 달천동, 안성시 대덕면은 대학캠퍼스의 소재지로서 대학 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과 목포시 충무동은 어촌 및 관광자원과 해양대라는 교육기관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구미시의 공단2동과 진미동은 구미시에 소재한 공단의 영향권에 속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차이율이 고르게 높았던 서울의 월곡동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며 그 결과 주민등록인구가 실거주자보다 전체 연령층에서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 덕곡면의 경우는 재개발 지역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개발이 부진하였다. 끝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차이율이 고르게 낮았던 인천의 석남1동은 인근의 공업지역과 재개발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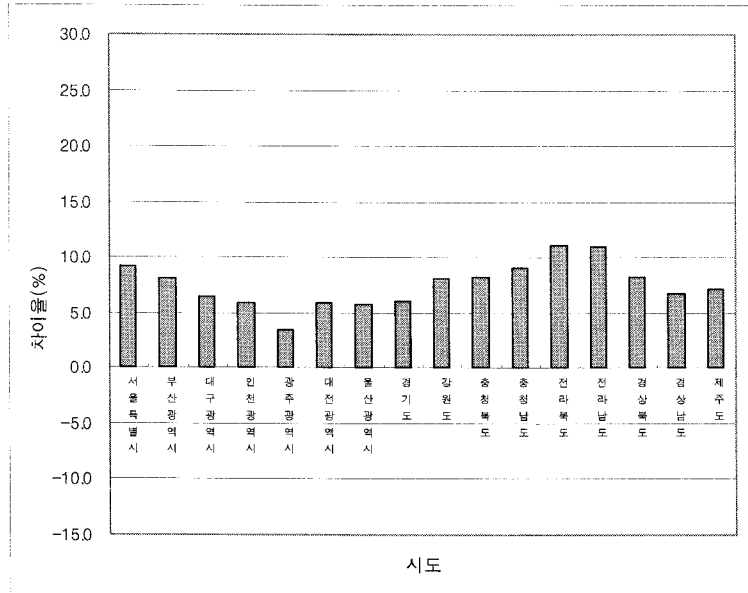
#### 4. 연령대별 심화분석

끝으로 이 절에서는 가장 차이가 두드러진 연령대들에 대한 심화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9>부터 <그림 11>은 20~24세, 35~39세, 70~74세의 연령층에서 광역시·도별 차이율을 비교하였다. 이는 앞서 <그림 5>와 <그림 6>에서 제시한 시·도 간 비교결과를 연령급 간으로 세분하여 더욱 명확히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연령대들 중에서 차이율의 시·도 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20~24세 연령대였다. 35~39세 연령대에서는 시도별로 차이의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70~74세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광역시보다 도에서 차이율이 더 커서 주민등록의 정확성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미흡한 점과 관련되었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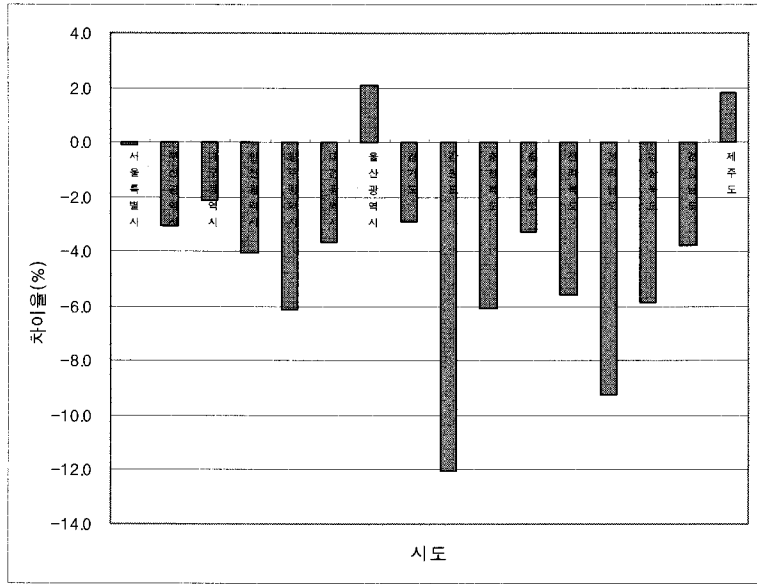
20~24세 연령대에서 차이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라남도였다. 반면 차이율이 최소값을 보인 지역은 광주광역시였다. 인접한 두 지역 사이에 서로 상반된 방향의 차이율이 나타나는 현상은 전라남도 출신의 청년층이 광주로 이주한 결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현상이 규모는 작지만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그림 9> 20~24세 연령대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 차이율



<그림 10> 35~39세 연령대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 차이율



〈그림 11〉 70~74세 연령대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 차이율

〈그림 12〉부터 〈그림 13〉은 상자도표(box plot)를 사용하여 20~24세 연령대에서 광역시·도별로 시·군·구와 읍·면·동의 차이율 분포를 제시하였다. 대체로 광역시의 경우 시·군·구별 차이가 적은 반면 도의 경우 시·군·구별 차이가 컸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도의 유형이 아니라 광역시와 유사한 형태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도시화와 산업화의 정도가 높은 현실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을 보면 읍·면·동별 차이율의 이상치(outlier)가 20~24세 층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들 연령대에서는 중앙값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치들이 거의 모든 광역시·도에서 나타났으며 이상치들이 중앙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도 매우 컸다. 특히 이상치들이 정의 차이율보다 부의 차이율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20~24세의 각 광역시도별 읍·면·동 차이율 분포를 보면 부의 방향으로 상당히 긴 꼬리를 가지고 중간값은 대체로 정의 방향에 위치해 있다. 긴 꼬리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앞서 본 상위 10개 읍·면·동들처럼 젊은 연령층을 대거 흡수하는 기관의 소재지로 추정된



다. 소수의 지역들이 젊은 층을 흡수하면서 높은 수준의 부의 차이율을 보이는 반면, 다수의 지역들은 젊은 층의 조사인구가 주민등록에 못 미치는 정외 차이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상반된 방향의 차이율이 상쇄되는 까닭에 이 연령대의 읍·면·동 차이율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준의 차이율이 그리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차이율이 지역적으로 크게 차이나는 양상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표 4>에서는 20~24세 연령대를 기준으로 차이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와 가장 낮은 시·군·구를 10개씩 추출하여 센서스의 5% 수준 자료를 사용 심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그림 13>에서 보듯이 차이율의 원인을 살펴기 위해서는 읍·면·동 수준에서의 분석이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센서스의 5% 수준 자료에서 시·군·구 수준에서만 응답자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위 시·군·구는 20~24세 연령대에서 총조사인구에 비해 주민등록이 훨씬 많은 경우이고, 하위 시·군·구는 20~24세 연령대에서 주민등록에 비해 총조사인구가 훨씬 많은 경우이다.

상위 10개 시·군·구 중에서는 전라북도가 4개 군이나 되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라남도과 경상북도가 각각 2개 군이었다. 대부분 농어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농어촌지역들이었다. 또한 20~24세 연령대의 차이율이 높은 지역은 인접한 15~19세와 25~29세 연령대에서도 차이율이 높았다. 이는 젊은 연령대의 높은 차이율이 특정 연령급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위 10개 시·군·구들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는데 대부분 대학이나 공단이 소재한 지역이었다. 이는 대학이나 공단에 유입된 젊은 층으로 인하여 주민등록과 총조사인구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임을 시사한다. 상위 10개와 하위 10개 시·군·구의 지역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젊은 층의 높은 차이율이 진학과 취업에 따른 인구이동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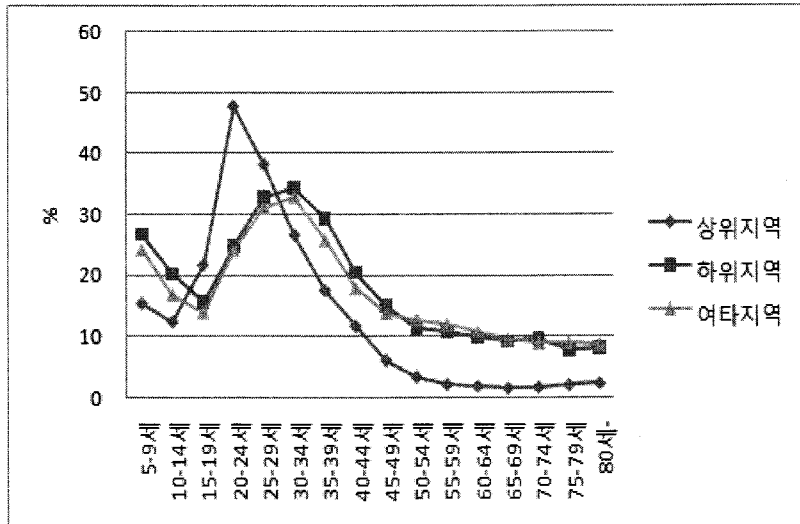
과연 이러한 추정이 지지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해당 지역 20~24세 층의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위 10개 지역 및 하위 10개 지역의 20~24세 연령층이 다른 지역과 인구이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센서스에서 제시된 5년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를 비교한 자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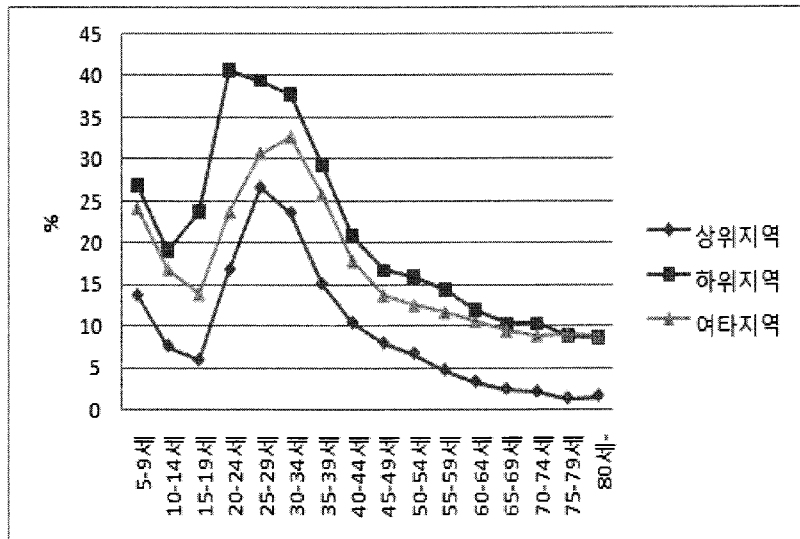
〈표 4〉 20-24세 연령대 차이율 기준 시·군·구별 차이율

시도	시군구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70~74세
상위 10위								
전라북도	장수군	7.4	27.4	62.4	56.6	33.7	28.5	(4.3)
전라북도	임실군	8.1	53.6	62.2	61.4	43.6	35.8	(9.6)
경상남도	합천군	17.8	44.7	61.5	54.3	31.3	26.2	(7.0)
경상북도	의성군	6.7	38.5	58.9	55.3	33.9	24.7	(9.5)
경상북도	영양군	5.3	15.3	57.5	51.7	29.4	19.1	(7.3)
전라남도	진도군	5.9	39.1	57.2	43.5	18.6	13.4	(12.3)
전라남도	장흥군	4.2	34.7	56.9	44.1	20.2	18.0	(8.9)
전라북도	순창군	14.9	35.3	56.9	52.6	33.5	31.7	(8.2)
전라북도	고창군	6.8	21.8	56.8	47.0	25.1	21.1	(10.4)
충청북도	괴산군	6.6	48.1	55.6	53.8	33.0	30.5	(6.3)
하위 10위								
경상북도	경산시	(1.6)	(55.5)	(62.4)	(6.9)	4.3	5.9	(0.3)
광주광역시	동구	1.4	(30.4)	(40.0)	(7.3)	6.4	9.3	(9.3)
강원도	춘천시	3.1	(21.3)	(32.6)	(0.2)	4.8	5.5	(10.9)
충청남도	연기군	6.3	(22.1)	(30.7)	9.5	14.4	15.3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4.7	(19.3)	(30.1)	(4.5)	4.7	5.5	4.0
충청남도	아산시	5.7	(38.1)	(27.1)	(4.3)	5.5	8.8	1.3
경상북도	칠곡군	3.4	(18.4)	(26.0)	(12.4)	2.7	7.0	(1.7)
경기도	안성시	5.3	(17.1)	(22.9)	(0.4)	2.3	6.0	(6.8)
서울특별시	동작구	4.5	(6.5)	(21.4)	(8.9)	5.7	9.4	0.1
경기도	오산시	3.7	(17.3)	(21.3)	(3.7)	1.1	2.5	(5.0)

분석하였다. 〈그림 14〉는 5년 전 거주지 기준으로 지난 5년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비율을 제시하였고 〈그림 15〉는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지난 5년간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비율을 제시하였다. 〈그림 14〉를 보면 상위지역에서 20~24세 층의 전출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림 15〉를 보면 20~24세 층의 전입 비율이 상위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24세 층에서 나타나는 주민등록과 총조사 인구의 차이가 주로 인구이동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그림 14〉 5년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인구비율



〈그림 15〉 5년간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인구비율

〈표 5〉 지난 5년간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20~24세 연령층의 특징(%)

항 목	범 주	지역			전체
		상위	하위	여타	
가구주와의관계	가구주	18.2	55.1	36.1	37.6
	가구주의 배우자	7.6	4.6	5.5	5.4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61.6	17.7	36.7	35.3
	기타	12.6	22.6	21.7	21.7
교육정도	안받았음		0.1	0.1	0.1
	초등학교	1.0	0.0	0.1	0.1
	중학교	1.5	0.6	1.1	1.1
	고등학교	34.8	18.6	23.9	23.6
	대학이상	62.6	80.7	74.8	75.2
교육상태	졸업	72.7	35.3	49.6	48.6
	졸업아님	27.3	64.7	50.4	51.4
경제활동상태	취업	49.0	31.3	41.1	40.3
	미취업	51.0	68.7	58.9	59.7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81.4	94.4	95.1	94.9
	사업주	5.2	4.5	3.5	3.6
	무급가족종사자	13.4	1.1	1.4	1.5
통근·통학 여부	통근	44.4	27.0	38.3	37.5
	통학	4.5	58.6	38.9	40.3
	안함	51.0	14.4	22.8	22.3
통근·통학 장소	현재 읍면동	61.9	53.6	30.8	32.9
	다른 읍면동	38.1	46.4	69.2	67.1
혼인상태	미혼	78.3	93.9	91.6	91.7
	유배우자	21.2	6.1	8.3	8.2
	사별		0.1	0.0	0.0
	이혼	0.5		0.1	0.1

끝으로, <표 5>는 20~24세 연령층 중에서 지난 5년간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인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주민등록보다 총조사 인구가 많았던 하위지역의 20~24세 층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폈는데, 다른 지역의 동년배보다 가구주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족과 별거하는 인구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이상의 비율과 졸업이 아닌 비율이 높았다. 센서스에서는 재학과 휴학, 중퇴 등을 구별할 수 없는데, 졸업이 아닌 비율이 높은 것은 재학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미취업의 비율이 높았다. 이 연령층에서 인구이동의 원인이 취업보다는 진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근·통학을 보면 통근보다 통학의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같은 읍·면·동에서 통근·통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른 읍·면·동으로 통근·통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읍·면·동에서 통근·통학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통근과 통학의 목적으로 인구이동을 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20~24세 층에서 주민등록보다 총조사 인구가 두드러지게 많은 지역들에서 진학 및 취업을 위해 최근 다른 시군구에서 이동해 온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입인구가 주민등록 신고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차이의 원인을 더 이상 직접적으로 실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반적인 자료 분석의 결과는 이들 전입층의 주민등록 신고 지연이나 미비에 따라 주민등록과 총조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추정을 지지해 준다.

#### IV. 결론

이상의 분석은 연령대별로 차이율을 파악하는 것이 주민등록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집계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등록과 총조사인구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수준에서 모두 연령대별 차이율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

연령대나 소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대한 차이율을 계산할 경우 정의 차이율과 부의 차이율이 서로 상쇄됨으로써 차이율이 과소평가되는 위험이 발생한다.

또한 연령대 비교의 결과를 보면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차이가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차이율이 연령대에 따른 일정한 유형을 보인다는 것은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차이가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주민등록 미비처럼 과거 특정한 행정현실이 과도기적으로 작용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의 비중이 현재도 양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고 앞으로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생애주기가 주민등록과 총조사인구의 차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해외거주나 조사누락 등의 요인으로 총조사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과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들이 증가한다. 그리고 노년층에서는 조사누락이나 사망신고 미비 등 주민등록신고의 부정확으로 인해 차이율이 다시 높아진다.

가장 주목할 만한 연령대가 15~24세의 연령층이다. 이 연령층에서는 대학 진학이나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대학과 공단 소재지로 집중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의 이동이 주민등록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등록과 총조사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을 지지해 주는 결과를 여러 지역수준에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차이가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은 두 조사의 차이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오차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15~24세의 경우 대체로 젊은 층들이 유입하는 기관들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학적이나 공단의 인사기록 활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집계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김근영·김순관·이신해. 2003. "Comparing Census Data with Resistration Data with Respect to Population and Household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국토계획》 38(1): 237-249.
- 김설희·강계화. 2005. "GIS DB에 연계시킨 행정등록자료를 활용한 현장조사 품질제고 방안." 조사연구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외교통상부. 2007. "2007 재외동포현황."
- 이건. 2007. "읍면동 수준에서 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의 집계인구 비교." 《통계》 33(1): 37-54.
- 이명진·서우석·이건. 2006. "주거부문 행정등록자료의 인구주택 총조사 활용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검토." 《통계연구》 11(1): 57-87.
- 이지연. 2007.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범위오차평가와 지역별 차이 연구." 한국인구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최봉호. 1997. "우리나라 인구통계 작성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인구학》 20(1): 5-25.
- 통계개발원. 2008.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 경제통계 및 인구주택총조사를 중심으로》.
- 통계청. 2008.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제3차 시험조사. 조사지침서》(미간행).
- 한국인구학회. 2006. 《인구대사전》 통계청.
- 홍두승·이건·이명진·서우석·장원호. 2002. 《인구주택 총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등록자료의 인구주택 총조사 활용방안》 통계청 연구보고서.
- Blum, Olivia. 2000. "Combining Register - Based and Traditional Census Processes as a Pre - defined Strategy in Census Planning." *Statistical Policy: Working Paper* 30. 1999 FCSM Research Conference.
- Brackstone, G.J. 1987. "Issues in the Use of Administrative Records for Statistical Purposes." *Survey Methodology* 13(1): 29-43.
- Eurostat. 2003. "Item 6: Quality Assessment of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Purposes." Working Group "Assessment of Quality in Statistics" Sixth Meeting. Luxemborug, October 2003.
- Laihonon, Aarno. 2000. "2001 Round Population Censuses in Europe." presented at Insee-Eurostat Seminar on Censuses after 2001, November 2000, Paris.
-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995. *Modernizing the U.S. Censu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Presvot, Ron and Charlene Leggiere. 1999. "Expansion of Administrative Records Uses at the Census Bureau: A Long - Range Research Plan." presented at the November 1999 Meeting of the Federal Committee on Statistical Methodology.

Scalia, John Jr. 1999. "Using Administrative Records to Report Federal Criminal Case Processing Statistics." presented at the November 1999 Meeting of the Federal Committee on Statistical Methodology.

Statistics Finland. 2004. "Use of Registers and Administrative Data Sources for Statistical Purposes. Best Practices of Statistics Finland." *Statistics Finland Handbooks*.

Sweet, Elizabeth M. 1997. "Using Administrative Record Persons in the 1996 Community Census." *U.S. Census Bureau Research Reports*.

[접수 2008/2/26, 수정 2008/10/14, 게재확정 2008/11/6]